

# 강릉~제진 철도 조기 착공 돌입

속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23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본보 지난 21일자 1·2면, 22일자 2면 보도)되면서 사실상 조기 착공 절차에 들어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포함되면 통과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면제된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발목이 잡혔었다. ▶관련기사 2면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2022년 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포함 인정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면제 수도권 연계 철도망 결합 물류·관광·산업 촉진 효과 예상 통일부 “국가 균형발전 기대 ... 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

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등과 연결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 완성도가 높아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종단철도망

(TKR)과 대륙횡단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은 정부 차원에서 2000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30년 이상 된 숙원사업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

문점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환영 담화문을 통해 “동해북부선은 환동해 경제벨트 핵심 교통망이자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동해선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민족의 염원과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라며 “강릉선, 춘천~속초, 동해선 등과 연계해 동서와 남북을 아우르는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호·최기영기자

##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수조원대 경제 창출”

(강릉~제진)

### 국내 경제에 예타 면제 환영

정부가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인정하자 강원도 내 정치권과 경제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장 업황 부족을 겪는 국내 건설업계는 신규 일감 확보 가능성을 반겼다. 도내 8개 건설협회로 구성된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오인철 회장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로 수조원대의 사업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어 “항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에 대한 생활시설투자가 확

### 건설업계 신규 일감 확보 가능... 관광산업 새 패러다임 기대 여야 정치권 “30년 숙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크게 기여” 논평

대되면 국내 건설업계는 획기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복 도관광협회장도 “철도교통망과 접경지역 안보, 자연환경을 활용한 투어상품을 개발해 유입구를 확대한다면 강원 관광산업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반색했다. 박경규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은 “새로운 철도망과 플라이강원을 활용할 경우 강원 관광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남북 경제협력을 뛰어넘는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은 “동해북부선을 향후 유럽까지 뻗어 나갈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내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논평을 내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현재 운행 중인 원

주-강릉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도 논평에서 “30년이 된 지역의 핵심 숙원사업이었다. 강원 영북권의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 촉진 등 경제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하늘·윤중현기자

# 동해북부선 남북협력사업 확정·예타면제 일사천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확정  
강릉~제진 110.9km 단선 형태  
대륙철도 연결 물류핵심 기  
도, 부산·울산·경북과 공조 대응

동해북부선(강릉~제진·110.9km) 연결사업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철도 연결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면서 "동해안 물류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기를 가져오고,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결로 산업·물류철도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은 이날 통일부의 결정에 따라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착공의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환동해권 북방경제 시대를 견인하는 '철(鐵)의 실�크로드' 개척 구상에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춘천~속초선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 물류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에 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북부선은 남측 유일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110.9km)이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되며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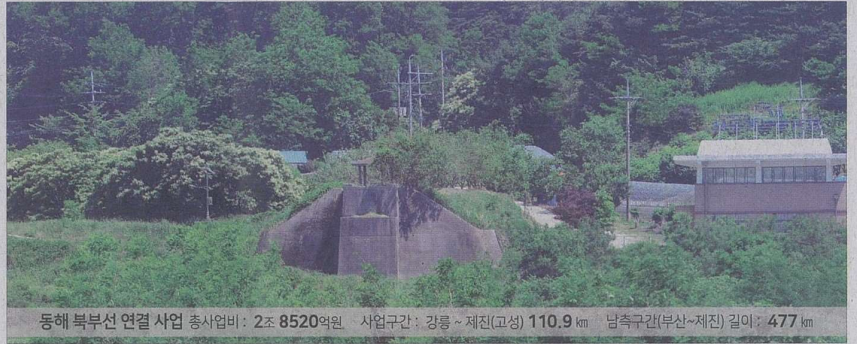
이와 함께 강원도는 부산·울산·경북 등 환동해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동해선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문순 지사는 "평화와 번영, 대륙을 향한 동해선 열차가 대한민국 남과 북 항구적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의 조기 착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 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동해북부선 주요 역사인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호 산림청장, 최문순 지사와 이철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세훈 ▶ 관련기사 3면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 총사업비: 2조 8520억원 사업구간: 강릉~제진(고성) 110.9 km 남측구간(부산~제진) 길이: 477 km

정부가 23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해북부선 연결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흔적만 남은 동해북부선 양양구간 철길. 본사08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4%'...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

## 건설투자 1.3% 성장... 국가경제 떠받쳤다

“SOC 투자확대 필요성 재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기 충격 여파로 인해 지난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1.4%의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건설투자가 1.3% 성장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2분기에도 실물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락하는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선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등 건설투자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토·일요일자 신문입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2008년 4분기(-3.3%) 금융위기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관련기사 19면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이 크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6.4% 줄었으며, 수출은 자동차와 기계류 등이 줄어 2.0% 감소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전분기(7.0%)에 이어 증가폭을 이어갔다. 도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전체 GDP에 0.2%포인트 기여했다. 2분기에는 코로나19가 미치는 실물 충

격파가 더 커 성장률 부진이 더욱 확연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투자도 신규발주 물량 감소 영향으로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SOC 예산을 확대하는 등 건설투자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생산가동률이 높은 건설투자 부문에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 피해 대상 구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3차 추경에서는 경제 부흥을 위해 SO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샘별기자 byul0104@

## 뉴스 Focus

정부, 대북사업 강드라이브

### 접경지 공동개발·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수면 위로

정부는 현재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의 2년 내 조기 착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2년 등 3년이 소요되지만 기본·실시설계를 동시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사기간을 5년 정도로 계산하면 2027년 개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동해북부선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기반을 놓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에 압승한 기세를 몰아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에 대북사업에 강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동해북부선’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4·27 남북정상 회담 및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고성 제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메시지에는 매우 진취적인 대북 제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철도 연결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2018년 12월 이후 중단된 남북 철도협력사업에 다시 힘이 실린다. 남북은 2018년 12월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했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후속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남북 간 철도연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측의 호응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공동개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지희기자

## ‘2.8兆’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2022년 착공

남북교류협력사업 인정 ‘예타 면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연결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받으며 2022년 조기 착공에 힘이 실렸다.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 회담 및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가운데 정부의 대북사업에 강드라이브가 걸렸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4면

23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9km 구간 연결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최장 1년 반에 이르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이

르면 2022년 조기착공할 수 있게 된다.

동해북부선은 단선 전철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조8530억원이다. 총 연장은 기본계획과 설계과정에 따라 104~111km로 유동적이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된 남북 철도연결사업의 일환이다. 남북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연결에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 물동량 북부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지희기자 jh606@